

2019. 05
May

전문가 코칭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이 종 오

비재무정보 공시와 기업윤리

윤리연구소

- 주요국 비재무정보 공시 법제화 동향
- 신뢰할 수 있는 비재무정보 공시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

기업윤리 브리프스

비재무정보 공시 ESG 정보 공시





비재무정보 공시와 기업윤리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01



비재무정보 공시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더불어 기업윤리와는 어떻게 연관되나요?

빙산은 노출된 부분이 10~30%이고 잠겨 있는 부분이 90%~70%에 달합니다. 이 빙산 논리는 기업의 자산을 구분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됩니다. 기업의 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형자산은 종업원과 고객의 관계, 브랜드와 기업명성, 공급망, 지적재산권, 지배구조, 환경과 사회적 관행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전문기관인 오션 토모(Ocean Tomo)가 S&P 500에 속한 기업의 시장가치의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비중은 1975년에는 17%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완전히 역전된 84%에 달했습니다. 무형자산이 더 중요해 졌다는 말입니다.

유형자산은 재무자산(또는 재무적 가치)로, 무형자산은 비재무자산(또는 비재무적 가치)로 부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은 조직이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이슈, 공정거래 관행,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의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무형자산으로 언급한 사항을 살펴보면 비재무자산 또는 비재무적 가치는 사실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관련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산 또는 창출하고 있는 가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비재무정보는 바로 이러한 정보를 의미하며 투자자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전문용어로 말하자면 ESG, 즉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재무정보, 즉 ESG 정보와 공시의 중요성은 주요국에서 이를 제도화·법제화 했거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Carrots & Sticks' 보고서(2016)에 의하면, ESG 관련 제도가 대폭 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회계연도 평균 근로자 수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비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사회적 책임 정보를 의무공시하자는 취지의 자본시장법개정안이 비록 자율 규정이지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도한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시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도 공표되어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는 ESG 공시를 의무적 사항으로 만들어 가고 있을까요? 기업의 ESG 이슈가 곧 재무적 위기로 전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너 일가의 갑질, 횡령,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이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단적인 사례입니다.

ESG 정보 공시의 제도화·법제화 흐름은 기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트렌드의 구체적인 반영입니다. 기업윤리는 투명성에서 시작됩니다. 재무정보는 법적 규제로 그 투명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제 자발적 영역에 존재했던 비재무정보, 즉 ESG 정보도 법적 규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는 윤리경영도 ESG 공시 등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본 법률과 제도가 바탕이 되어 있을 때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가 인식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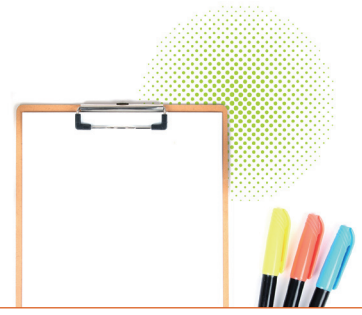
효과적인 비재무정보 공시를 위해(혹은 관련 최근 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적이 없는 정보 공개(또는 공시)는 비효율적이며 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UN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ustainable Stock Exchanges Initiative : SSEI)는 ESG 정보 공개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입증하여 저렴한 자본조달 가능, △비용 절감·수익 창출·위험 회피 등의 기회를 포착하여 이윤과 성장 추구, △환경·사회·경제에 미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약속함으로써 기업명성과 브랜드 창출, △기업의 가치창출 능력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 △보고과정을 통해 투자자와의 관계 개선, △전략의 실현과 ESG 영향에 대한 실적 평가 등입니다.

기업은 ESG 정보공개가 의무든, 자율이든 우선 정보공개 목적 즉 어떤 편익을 얻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할 정보가 가지는 관계적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정보가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한 양적·질적 데이터 관리는 기본이며, 특히 정보공개에 관한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해 어떤 정보가 중요시되고 있는지를 분류해 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니즈를 파악하되 타 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개하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국내에서는 스톱워드십 코드 실행이 본격화되면서 이슈가 되었는데, 주주 중 스톱워드십 코드 가입 기관투자자 유무, 특히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그들이 기업에 관여할 때 관심을 갖는 이슈 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하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경영 팀과 투자자 대응 부서인 IR팀이 협업하면 효과적입니다. 양질의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되, 전략적으로 공개하십시오! ESG 정보공개는 이러한 투명성과 전략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영진약품 사례(1)



지난 호에 이어 ISO 37001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제약업계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이번 호에서는 영진약품 CEO와의 인터뷰를 통해, ISO 37001을 중심으로 한 윤리/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ISO 37001 도입을 직접 담당했던 윤리경영부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실무적 과정 및 절차를 중심으로 도입 전, 과정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EO 한마디



이재준 영진약품 대표이사

“윤리경영을 회사의 DNA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은 **정직성, 책임감, 공정성, 열정**이라는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저만의 경영방침 및 영진의 조직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에 대한 행동기준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동과 관습은 물론 근본적인 사고방식(mindset)을 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설정하고 행동을 변화 시키는데 **ISO 37001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입 후, 그저 문서나 구호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 모두의 참여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실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부패방지에 관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약은 결국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섬기는 윤리경영에 입각해 사업을 수행해 나간다면 실적은 자연스럽게 따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슬로건에 그치는 것이 아닌, **회사의 DNA이자 지속가능경영의 초석인 윤리경영!** 이를 바탕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Q1. ISO 37001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CEO의 강력한 도입 의지”

A. 제약업계는 공정거래, 부패방지과 관련된 윤리경영 이슈가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제약업계의 특징을 바탕으로 저희 영진약품 역시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그 결과 저희는 업계 내에서도 강력한 컴플라이언스(CP)를 추진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ISO 37001이 국내 도입되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던 중, 작년에 새로 부임하신 대표이사의 강력한 도입 의지가 ISO 37001 도입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경영평가 항목에 ISO 37001 도입을 직접 추가 할 정도로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이러한 **CEO의 강력한 도입 의사(意思)**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2018년 12월 ISO 37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Q2.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임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원팀(one team) 조직문화로 극복”

A. 아무래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내용은 물론이고 ISO 37001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했을 **임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실무를 담당했던 저희 부서원들에게도 초반에는 해당 표준과 요구사항들이 익숙하지는 않았으니까요. ISO 37001은 하나의 경영시스템이기에 계획(Plan)-실행(Do)-검토(Check)-조치(Act) 주기를 구성하는 절차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전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패방지나 윤리경영 등 큰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생소한 표준의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한 전 임직원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진약품은 기본적으로 **원팀(One Team)의 조직문화**가 기본 바탕에 있어서인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로 많은 부분을 극복**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외부인사는 영진의 전 부문 참여의지가 인상적이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을 정도로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증 획득이라는 결과를 얻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호에서 영진약품 사례(2)가 계속되며, 도입 이후의 변화와 ISO 37001 도입을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주는 영진약품만의 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재무정보 공시 우수 사례

2016년 11월에 오픈한 네이버 증권의 비재무정보 서비스 사용자가 2018년 3월, 100만 명을 넘어섰다. 노동환경, 직원복지, 친환경 정책 등의 비재무정보가 기업 가치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지난해부터 종업원 50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 비재무적 성과 공시를 의무화했다. 그 외 각국 정부, 글로벌 기업들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활동을 선제적으로 노출하고 규범화하는 추세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특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국이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면, 비즈니스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돌보기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비재무정보 공시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비재무정보의 공개와 지속가능경영의 성과 측정을 위해 UN을 중심으로 여러 선제적인 노력이 있어왔다. 보고 형태와 기준을 참고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주요 특징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코카콜라 - 비재무적 성과를 핵심성과지표(KPI)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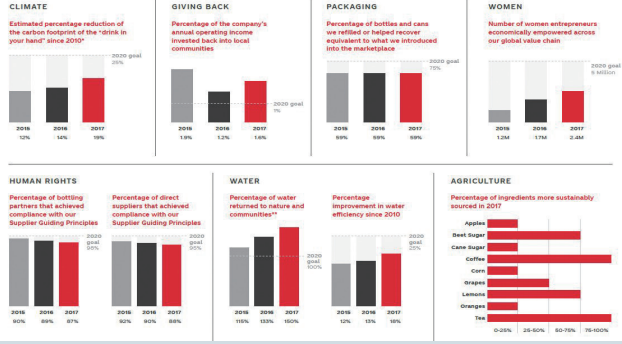


코카콜라 컴퍼니는 코카콜라로 대표되는 무알콜성 음료 및 시럽을 제조·유통하는 미국의 식음료 기업이다. 글로벌 기업 코카콜라는 이미 2012년부터 비재무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 왔다. 2018년 발효된 유럽연합의 대기업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지침 이전부터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해 온 것이다. 코카콜라의 비재무정보 공시 체계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는 UN의 협력기관) 표준을 따르며 2012년부터 유엔글로벌컴팩트(UNGC)의 우수회원사인 'UNGC LEAD' 기업으로서 UN 프로그램의 원칙 및 체계를 준수하고 있다. 코카콜라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UN과 국제사회가 인류 공통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와도 연계되어 있다.

코카콜라의 비재무정보 보고 특징은 핵심성과지표(KPI)다. 경제·환경성과, 노동 관행, 인권, 사회 영향, 제품 책임 등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비재무적 목표 및 성과를 관련 지표와 함께 제공한다. 보고서에는 이슈별 경영방식과 목표, 지표, 파트너십 프로그램 정보도 포함된다. 회계연도 내 지속가능경영 성과지표, 마케팅 정책의 효과성과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경영 수칙의 준수 여부도 외부기관에서 검증을 받아 공시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프로젝트 성숙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목표 달성도 등 기업의 우선순위 변동에 따라 공개하는 KPI 종류도 늘려가고 있다. 일단 공시한 KPI는 내부 검토는 물론 외부 검증도 병행한다. 아직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지속가능사업 평가지표 및 산업규정이 많지 않은 만큼 코카콜라는 자사가 발표하는 KPI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공개하고 있다. 정성적인 비재무정보를 수치화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의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2020 GOALS & PROGRESS

Our publicly reported 2020 sustainability goals drive us to continually improve. We aim to achieve our goals through a concerted effort by The Coca-Cola Company and nearly 250 bottling partners in more than 200 countries and territories. We have set ambitious goals to drive systemwide change beyond small operational improv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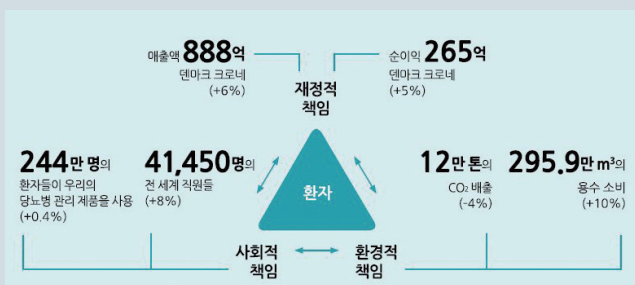


출처: 코카콜라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https://www.coca-colacompany.com/2017-sustainability-report>

노보 노르디스크 -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의 유기적인 통합

덴마크의 글로벌 제약기업 노보 노르디스크의 비재무정보는 통합보고서 형태로 제공된다. 통합보고서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기준의 재무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장기목표, 미래 비전 등의 비재무적 정보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이러한 통합보고서는 재무 및 비재무적 자본이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체계 안에서 어떤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성과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기존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는 다루는 자료의 성격부터 다르다.

노보 노르디스크가 이러한 통합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90년대 중반에 자체적으로 구축한 경영 시스템이 있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경제, 환경, 사회의 세 가지 축을 세우고 성과 지표와 연동시켜 개별 사업부의 목표도 지속가능경영이라는 틀 안에서 추구해 나가게끔 했다. 그리고 이 성과 측정 결과를 통합보고서 안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거버넌스가 노보 노르디스크의 지속가능경영을 가능하게 한 토대였던 것이다.



출처: 노보디스크, '2014 통합보고서'

국내 사례

국내에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성과를 발표하는 등 비재무정보 공시에 힘쓰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그중 관련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글로벌 상을 수상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주요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자.

KB금융그룹 - 명확한 콘셉트를 통한 보고서 이해도 고취



KB금융그룹은 주력 자회사인 국민은행, KB국민카드가 포함된 국내 대형 금융그룹이다. KB금융그룹은 2017/2018년 LACP(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 Vision Awards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세계적 권위의 홍보·마케팅 전문기관인 LACP가 주관하는 비

전 어워즈에는 포춘(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기업 및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등 매회 20여 개국 약 1000여개 기업이 응모하고 있다.

상을 수상한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콘셉트는 '오른길을 만나다'이다. KB가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을 '오른길'로 제시하고 국내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사

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옳은 길'을 가기 위한 KB의 지속적인 노력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다. KB금융그룹은 이해관계자 전달과 서술능력, 재무 보고, 메시지 명확성, 정보 전달력 등 6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100점 만점에 총 98점으로 통합 44위, '지속가능' 부문 2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50에 별도로 선정됐다. KB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명확한 콘셉트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현대건설 - 산발적인 기업 보고서들을 화학적으로 결합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종합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은 국내 기업 중 최초로 CRRA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 Awards)에

서 입상한 이력이 있다. CRRA는 전 세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대상으로 9개 부문별 우수성을 평가하는 상으로, 전문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세계적 권위의 상이다. 현대건설은 2012년 CRRA 통합보고부문 2위에 입상했다.

현대건설은 2011년부터 통합보고 형식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해 경제, 사회, 사회적 가치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통합보고서는 재무, 지속가능성, 지배구조 등 산발적으로 발간되는 기업보고서를 화학적으로 결합시킨다. 투자자들은 단일 보고서를 통해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한눈에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건설의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의 통합보고는 이후 유럽 등에서 대두된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바람에 선제적인 대응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비재무정보의 중요성, 앞으로 더 강화될 것

올해 3월, 재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주목한 기업행사가 있었다.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디스 코드를 발송시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 이후 첫 적용 사례였다. 이제 국내 기업들도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의 존재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친환경, 노동환경,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비재무정보의 수집, 집계, 수치화, 효과적인 공시 방법에 대한 기업들의 진지한 고민과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주요국 비재무정보 공시 법제화 동향

삼성전자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인권경영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있다. 지난해 3월 UN이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을 지적하는 자료를 낸 것이다.

이처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여론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비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규범화하는 국가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원활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주요 국가의 비재무정보 공시 법제화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수출 중심의 우리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동향

최근 국내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지난해 도입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다. 막대한 자본을 가진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으로서 투자한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기금을 투자받은 기업은 환경보존,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이를 정리한 비재무정보를 효과적으로 공개할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둘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동향이다. 2016년 국회에서는 상장 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사회적 책임 활동(CSR) 내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외 임원의 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재무적 정보 이외에 더 다양한 정보를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윤리경영, 직원 복지 및 기타 사회적 책임 내역 등의 비재무정보다.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작년 11월, 금융감독원은 담보 상태에 있던 해당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저출산 대응 노력이나 환경보호,

노사관계 등의 사항을 공시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자 판단에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책임 공시 의무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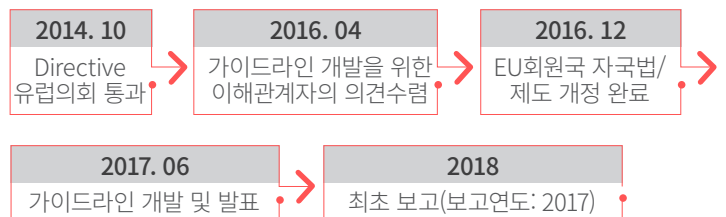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무역에 있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비재무정보 공시화 동향을 살펴보자.



유럽 - 유럽연합(EU)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

2011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지역인 유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CSR 규범을 운영하고 있다. 비재무정보 공시 법규화도 선도한다. 가장 최근에는 ‘EU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2014/95/EU)’을 통해, 연평균을 기준으로 임직원 수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비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유럽 지역 대상 기업들은 자사의 비재무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KOTRA에 따르면 유럽 지역 대기업 6000여 곳이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환경·노동·인권존중·부패방지 등의 비재무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의할 사항은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비재무정보 의무화 공개 방침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회사가 공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회사가 공개요건에 포함된다면 비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U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 도입 흐름



출처: EU Commission

유럽의 비재무성과 공시 의무화는 국내 기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유럽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을 설립한 기업은 유럽 기업에 준하는 인권, 노동환경, 기업투명성정책, 위험관리 정보 등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비단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럽연합의 소매업체가 한국의 제조업체에 물건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소매업체는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협력업체인 한국 기업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

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유럽 기업과의 원활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비재무정보 공시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 연방공시법 S-K 규정, 사베인스 옥슬리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유럽연합보다는 덜한 편이다. 그러나 주주중심 자본주의와 민간부문의 자발성으로 투자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규들이 제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연방증권법’과 ‘사베인스 옥슬리법(Sarbanes-Oxley)’이 있다.

첫째, ‘연방증권법’은 환경 정보, 회사 지배구조, 그 외 사업 정보 등 일부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제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방공시법 규칙 S-K Item 303에서는 경영자의 경영 토론 및 분석 보고서(MD&A)를 규정하고 이 보고서에 기업 성과와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 상태와 기회 및 위험을 과거와 미래의 관점에서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베인스 옥슬리법’은 회계 부정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상장회사의 회계 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이다. 2002년 7월 30일 법안의 발의자인 상원의원 폴 사베인스(민주당, 메릴랜드)와 하원의원 마이클 옥슬리(공화당, 오하이오)의 이름을 따서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미국 내 상장사들의 회계 문제 발생 시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회계장부의 정확성을 보증한 기업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 법인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다. 기업의 투명성, 준법경영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중국 - 정부 주도·민간 호응의 비재무정보 공시 기초 확산

우리나라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은 사회주의 전통의 영향으로 정부 주도의 CSR 촉진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중국 국내외 기업 전반에 대한 CSR 실행 압력을 높이고 있다.

2015년 12월 홍콩거래소는 ‘ESG 보고서 지침’을 정식 발표해 2016년 회계연도부터 상장기업에 비재무정보 공시를 강제화 했다. 또한 2016년 12월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ESG 관련해서 강화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식을 공개 발행한 기업의 정보공개 관련 연차보고서의 내용 및 양식에 수정 지침을 내렸고, 같은 달 선전거래소는 오염물질 배출기업의 개념 및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수정해 공표했다.

민간 부문에서도 ESG 정보 공개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 CSR 컨설팅 및 연구기관인 신타오는 2017년 7월 <중국 증시 대표기업 100개사 CSR 보고서 실질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상장기업 100개사의 CSR 이행 수준을 평가했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100개사 중 86개사가 CSR 보고서를 발간해 비재무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4%가 국유기업인 것에서 중국 정부의 비재무정보 공개 의무화의 지가 엿보인다. 정부 주도, 민간 호응의 흐름 속에 중국의 CSR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견·중소기업들도 비재무정보 공시 동향에 대비해야

이처럼 주요국들은 비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거나 엄격히 감독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비재무정보가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 대기업들은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비재무정보 공시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중견·중소기업들도 각국의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거래하는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비재무정보 제공 불충분으로 CSR 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협력사 선정 배제, 납품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으며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할 수 있는 비재무정보 공시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

지난 달 4일,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점검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한 사항을 중심으로 비재무정보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또한 최근 스투어드십 코드 지원의 일환으로 노동 및 소비자 관련 비재무정보 공시를 확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증권 비재무정보 서비스 사용자가 100만을 넘으며,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비재무정보 공시의 중요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화두가 되고 있는 비재무정보 공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또한 어떻게 하면 신뢰성 높은 비재무정보 및 성과를 공개할 수 있을까? 이번 보고서리뷰에서는 글로벌 컨설팅사인 EY가 발행한 ‘The Road to Reliable Nonfinancial Reporting’(2016)을 통해 신뢰성 있는 비재무정보 제공 과정에서 기업들이 마주하는 장애물과 이에 대한 단계별·시기별 대응 및 극복 방안을 살펴보겠다.



신뢰할 수 있는 비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 증가

EY의 2014년 *Tomorrow's invest rules* 리포트에 의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의사결정 시 ESG 정보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같은 기관의 2015년 조사는 200여 개가 넘는 기관 투자자들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 기업의 비재무정보를 투자 의사결정에 필수 요소로 여긴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기업이 비재무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들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공개하는 비재무정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 역시 중시한다.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장애물

그러나 신뢰성 높은 비재무정보 공시 과정은 쉽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첫 째, 공시를 위해 수집해야 하는 정보의 출처가 매우 다양하며, 그 양 역시 방대하기에 정보 수집의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둘째, 재무정보 대비 스토리텔링 방식의 정성적 기술 형태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 기준의 통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기업은 비정확성, 불완전성 및 주관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관리 과정을 균일화·자동화 하는 동시에 내부 감사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재무정보 공개 및 성과 관리에 있어 기업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장애물들은 대체로 기업의 ESG 이슈에 대한 성숙도에 따라 다르다. 오른쪽 표를 통해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

단계(성숙도)	설명	직면하는 전형적인 장애물/어려움
초보 단계 (starter)	비재무 정보·성과 관리 및 외부 공시를 막 시작한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개념들에 대한 획일적인 정의, 범위 설정의 어려움 및 이를 GRI¹⁾, GHG²⁾, 통합보고(IR)와 같은 적합한 스탠다드 내 개념과 정렬하고, 활용하는데 겪는 어려움 • 관리(governance)와 통제(control) 개념 정의, 차별화의 어려움 • 본사로부터 멀리 떨어진 업장에서의 비재무정보 동원·수집의 어려움 • 경영진 승인의 어려움
중간 단계 (middle of the pack)	비재무 정보·성과 관리 및 외부 공시를 어느 정도 진행해 왔으나, GRI 등을 비롯한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을 통해, 체계를 보다 개선하고자 하는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적 요소와의 연결과 내부 거버넌스 기능 개선의 어려움 • 비재무정보 관리 기술(성과 관리 리포, 스마트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의 적극적인 활용의 어려움 • 조직적 변화 관리 및 “통합적 사고” 향상에 대한 어려움
선두주자 (front-runner)	지속가능성에 있어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비재무정보의 사용도가 높으며 비재무정보에 대한 성숙도를 재무 정보 수준으로 고도화시키고자 하는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추적(audit trail) 관리, 관련 IT기술 총괄(總轄)의 어려움 • 복잡한 공급망 내 영향 관리와 정보 수집 및 오랜 시간 축적된 정보 관리의 어려움 •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두 종류의 정보를 연결시킨 통합적 사고와 의사결정 고도화의 어려움

기업이 빠질 수 있는 공통적인 ‘함정’

- 제한된 공시 관리·감독 및 승인과 관련된 공식적인 거버넌스 조직
- 보고 담당자인 개인 및 기업 내 한 부서에 과도하게 의지
- 문서화되지 않은 절차 및 기타 프로세스
- 정확한 측정 방법에 대한 고려 없이 의지 천명
- 내부 통제 환경의 불확실성
- 일반적으로 인정된 측정 방법론의 부재, 부족함
- 기준치 및 기준치 관리의 부재

출처: ‘The Road to Reliable Nonfinancial Reporting’ (2016), EY International, p.10&12

1)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약어로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2) 온실가스 프로토콜(Green House Gas Protocol)로, 온실가스 배출 관련 회계 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단계별·시기별 대응 방안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장애물 등을 극복하고, 기업이 신뢰성 높은 비재무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 시작은 대체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이 효과적인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사적 관리(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후, 비재무적 이슈들에 대한 중대성 평가,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 구축, 관련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 고려, 그리고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 과정 개발 등이 뒤따르게 된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업은 네 가지 요소에 있어 튼튼한 방어벽을 구축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비재무정보를 위해 방어벽을 구축해야 할 네 가지 요소

실행(operational function)

비재무적 이슈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하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의 실질적인 실행 과정을 의미한다.

관리(control function)

비재무정보와 관련된 대내외 제도 및 정책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리스크를 파악 및 관리하는 관리 전반의 과정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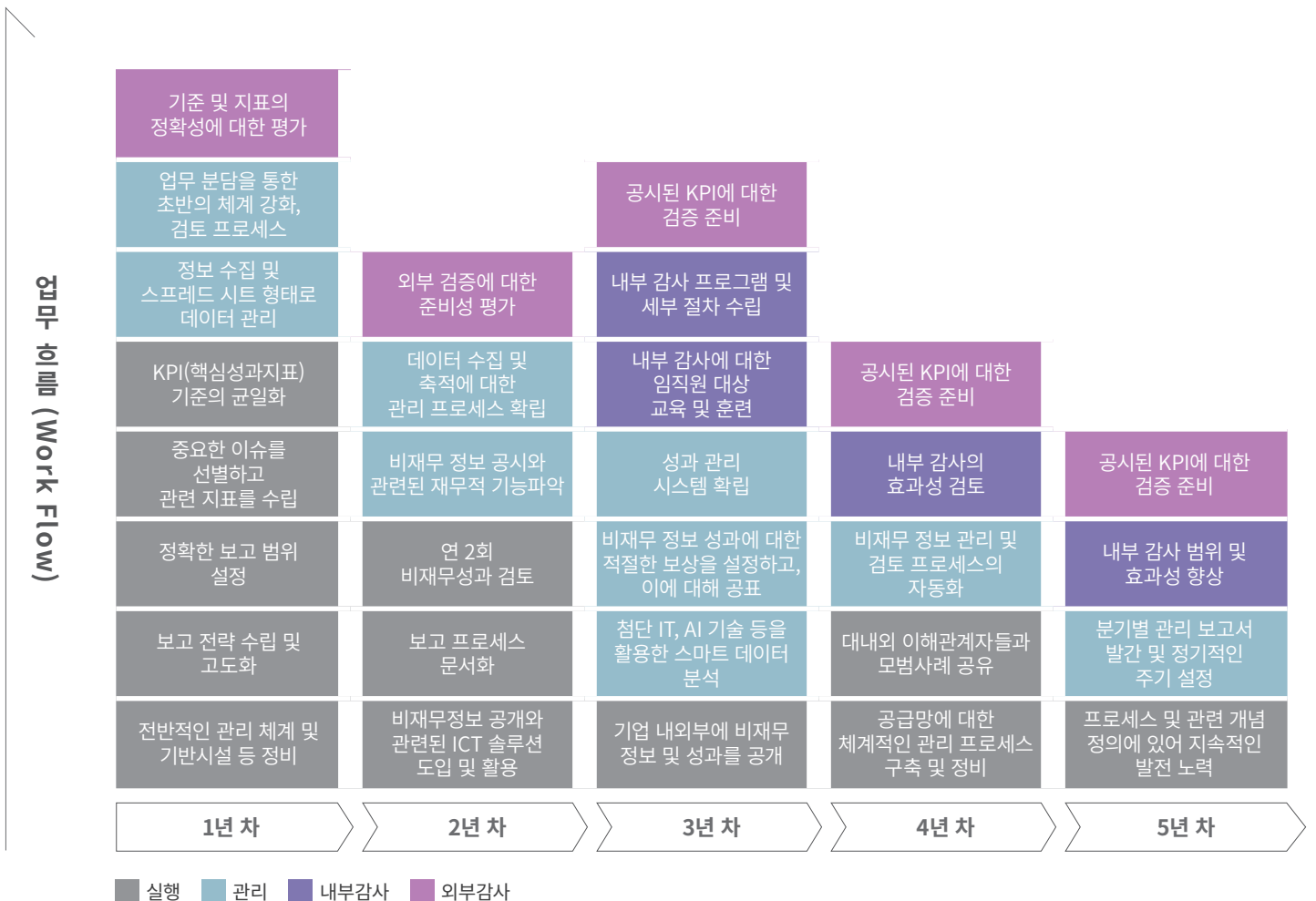
내부 감사(internal audit)

비재무정보 및 관련된 각종 데이터 관리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감사를 시행하고, 대내외 기준들을 잘 충족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보고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외부 감사(external audit)

독립적인 외부 감사, 검증을 통해 기업이 공개하는 비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업은 위와 같은 네 가지 요소에 있어 시기별·단계별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할 수 있다. 한 예시로 아래와 같이 시기별 업무 프로세스를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 주요 참고 문헌 - 'The Road to Reliable Nonfinancial Reporting' (2016), EY International



국내 동향

01 「ISO 37001 (2016)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가이드북」,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기업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ISO 37001 (2016)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가이드북」을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필요한 누구나 가이드북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이드북은 ISO 37001의 제정 배경,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세부 요구 사항, 이행 효과 및 인증 리스크 등을 소개한다. 반부패 관련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법제화 동향 역시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홍보 > 기업윤리 자료 > 전문자료)

* 참고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9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79186&currPageNo=1&confId=99&conConfId=99&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02 프랜차이즈 기업, 윤리경영에 박차

여러 '갑질' 파문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며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오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예로 카페 브랜드인 커피베이는 지역 사회와의 나눔 및 상생 도모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LA 한 인타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를 후원했다. 지난 3월에는 사회취약계층인 쪽방촌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후원하기도 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솔도시락 역시 자사의 '따끈한 도시락'이라는 이미지와 특성을 살려, 사랑의 밥차 김장나눔 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동향은 탈선, 불법 행위나 가맹점의 '갑질' 등을 이유로 프랜차이즈 기업이 사회적 지탄을 받아오자,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 참고 - 일요시사, 2019.04.08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39>

03 식음료업계, 지역 사회와의 동반 성장 노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은 지역과의 상생 측면에서 주요한 지속가능경영 활동 중 하나이다. 이러한 활동에 최근 식음료업계가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지역 농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임과 동시에 지역과의 상생 역시 강화하고 있다. 다양하고 맛있는 먹거리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동시에 지역 농가의 판로 개척 어려움을 해결하여 지역의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식음료 기업은 특정 지역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그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음식 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한 예로 CJ프레시웨이는 강원도 철원, 경북 예천 등을 비롯한 전국 40여 개 지역과 협약을 체결하고 재배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아이에프 역시 지난 달 충남 서산과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사회와의 동반 성장에 나섰다.

* 참고 - 산업경제뉴스, 2019.04.09.
<http://www.biznews.or.kr/news/article.html?no=8719>



해외 동향

01 유럽연합(EU),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EU가 지난 8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포함한 총 7개 윤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무인자동차 내 AI가 활용되는 등 다방면에서 AI가 상용화되며 여러 윤리적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앞으로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세부 내용에 대한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AI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G7 및 G20 국가들과도 AI 윤리 가이드라인 정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AI 윤리 주제와 관련해서는 브리프스 2019년 1월 호를 참고할 수 있다)

* 참고 - KBS, 2019.04.0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6187&ref=A>

02 국제금융공사(IFC), 임팩트 투자에 관한 보고서 발표

세계은행그룹 소속인 국제금융공사(IFC)가 지난 9일 임팩트 투자에 관한 보고서('Creating Impact: The Promise of Impact Investing')를 발표했다. 임팩트 투자란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임팩트)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해당 보고서는 투자자들의 임팩트 투자에 대한 투자욕구가 약 26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했다. IFC는 이 같은 임팩트 투자에 대한 요구 증가가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향후 수십 년간 기존의 베이비붐 세대에서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로 최소 수십 조 달러의 재산이 이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젊은 투자자들이 보다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투자 전략을 선호하며 기꺼이 많은 금액을 투자하려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동향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 매일경제, 2019.04.09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4/216300/>

03 포르쉐AG, 2014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5% 이상 감소

포르쉐가 자사의 획기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내용을 밝혔다. 2014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5% 이상 줄였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포르쉐의 차량 생산량은 10만 1449대에서 18만 4791대로 82% 가량 증가했으나, 에너지 소비량은 31% 감소했다. 포르쉐는 자사가 5년 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재생 가능한 TÜV 인증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독일 내 포르쉐 차량의 철도 수송 역시 탄소 중립 프로그램(Greenhouse Neutral Programme)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모든 비즈니스 가치 사슬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귀감이 될 사례다.

* 참고 - 매일경제, 2019.04.08.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4/213265/>



국내 행사

기업 청렴경영 전문가 양성과정(舊 기업윤리 사내전문가 양성과정)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정착을 지원 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는 ‘기업 청렴경영내전문가 양성 과정’ (본 브리프스의 마지막 페이지 ‘교육과정 알리미’ 내 상세내용 참고)

•주최: 국민권익위원회 •일시: 2019.05.31 •장소: 중소기업DMCT타워 2층 DMC홀(서울 마포구 소재)

2019년 한국윤리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원고 접수

오는 6월 8일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갑을문화와 윤리경영"이라는 주제로 2019년 한국윤리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며, 일반 논문 발표를 위한 학술 세션이 개최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논문 접수를 받고 있음

•접수: 2019.05.17 •접수처: kabethics@gmail.com
•접수 관련 문의: 서강대학교 장영균 교수(youngkyunchang@gmail.com | 02-705-8535)

제10회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시대_SDGs 리더기업과의 대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UN이 제시하는 기업 시민의 참여 방안, 유수의 기업들의 사례 공유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조선일보 •일시: 2019.05.14 •장소: 신라호텔, 서울



해외 행사

2019 Sustainability Leaders Congress

지속가능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위해 고위 경영진 및 CSR 전문가들을 강연과 사례 소개, 접근 방법론 등에 대해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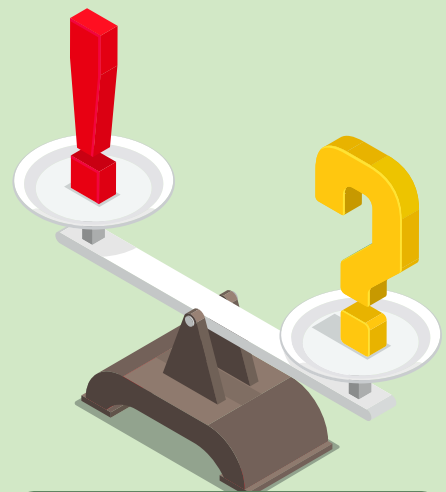
•주최: IFS Group •일시: 2019.05.15 ~ 16 •장소: Berlin, Germany

✓ 청탁금지법 Check!

<변화하는 대한민국>

청탁금지법 신고 급증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해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의 위반 사례 신고 건수가 1만 41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접수된 신고는 8501건으로 시행 1년 차였던 2017년의 신고 건수(5599건)보다 52% 가까이 늘었다. 위반 유형 별로는 공직자 등이 강의로 명목으로 초과 사례금을 받은 후 반환 혹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외부 강의' 건이 59.5%(840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청탁 26.7%(3765건), 금품 등의 수수가 13.7%(1926건)로 그 뒤를 이었다. 채용 비리 등을 포함한 최근의 이슈를 계기로 부정청탁 관행에 대한 인식이 커지며 신고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평소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이 있었나요? 질문해주세요!

질문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 담당관실(sykwon@ips.or.kr)

지식 1G



기업이 비재무정보를 공시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를 살펴보자.

[GRI: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조직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전략, 활동, 성과, 미래계획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 작성 지침이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원칙과 정보공개 표준별 지표 정의에 대한 정의를 제공한다.

[국제표준화기구: ISO 26000]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에 대한 국제표준이다. 환경, 인권, 노동, 지배구조, 공정한 업무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의 7개 분야에 대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통합보고위원회: 통합보고 프레임워크 (IR Framework)]

조직의 장기적 가치창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요한 재무, 비재무 요인을 통합하여 보고하는 보고서 작성 프레임워크다. 지배구조, 비즈니스 모델, 전략, 미래 전망이 어떻게 경영성과로 연결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업 청렴경영 전문가 양성과정(舊 기업윤리 사내전문가 양성과정) 참여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정착을 지원 하기 위해 매년 ‘기업 청렴경영내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5월말에 운영될 예정이니 윤리 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개요

- 일시·장소 : 2019년 5월 31일, 중소기업DMC타워 2층 DMC홀(서울 마포구 소재)
- 참여대상 : 기업의 윤리경영 담당 또는 윤리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의 직원
- 신청방법 : 이메일(nansay@korea.kr)로 신청
- 신청양식

업종*	기업명	부서명	성명	직위 (직급)	연락처 (사무실/핸드폰)	이메일

*업종 :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유통·서비스업, 기타

※ 문의사항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044-200-7166



독자퀴즈

Q. 다음 중 글로벌 비재무정보 공시 법제화 동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 ① 미국의 연방공시법 규칙 S-K Item 303
- ② 유럽연합의 GDPR
- ③ 미국의 사베인스 옥슬리 법
- ④ 홍콩거래소의 ESG 보고서 지침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sykwon@ips.or.kr)
 *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 : ④ 번**

지난 호 정답자는 장승민 님, 박진수 님, 추성호 님, 하성철 님, 김영화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